

공공기관 2차 이전 무산 위기 국가 균형발전 또 물건너가나

검찰개혁 갈등·아파트값 논란에
핵심 국정과제 추진 동력 사라져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과 그 대처를 둘러싼 논란 등의 이슈에 휘말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회 일부 기능 이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비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 충청권 관련 대책만 반복되고 있다. 정부 출범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가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7일 정부·여당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세종의사당은 현 여의도 부지의 2배에 가까운 61.6만㎡ 부지에 1조400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어질 예정으로, 현재는 정부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가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이 연일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낙후·쇠퇴한 지역이 아닌 대전·충남의 새 혁신도시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균등하게 나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현재 정부 소속 및 공공기관 수는 수도권이 263곳(36%), 충청권 175곳(24%), 영남권 147곳(20%), 호남권 89곳(12%)이다. 호남권이 가장 열악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셈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 등 소외·낙후지역을 최소한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에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국책은행 등 대상 기관들의 반발, 정부·여당 내 행정수도 완성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금이야말로 낙후·소외지역에 대해 정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는 '신 불균형 성장전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잠재력과 자원을 가졌지만 성장의 출발선에 서지 못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정국 혼란 사과...공수처 출범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추-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와 공군측은 8일 전투기 훈련시간과 횟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하는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 업무 협약을 맺는다. 7일 오전 군 항공기가 광주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군공항 전투기 훈련 횟수·이착륙 방향 등 조정

광주시·공군 업무협약 추진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광주시와 공군이 처음으로 광주시민의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낮추기 위해 손을 잡는다. 전투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행 횟수와 이착륙 방향, 비행 시간대 등을 조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더라도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 기간 동안 시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 군 공항 조기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군 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도적 참여, 이전 기간 시민 소음 피해 최소화, 소음 피해 가구 적극 지원 등 3단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며 "이번 공군과 업무협약에서는 소음 저감을 위한 훈련 시간과 횟수, 이착륙 방향 등을 조율하겠다. 이착륙 방향만 조금 바뀌도 소음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군공항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방문과 대책논의를 했지만,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8일 오전 11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시민소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결국 군공항 조기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용역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그 곳에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3단계

중 하나인 주민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을 옮기기 전까지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법을 개정으로 소음피해가 입증되면 주민 1인당 매달 3만~6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에서도 소음피해 측정을 하고 있다. 피해 가구나 피해단지가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공식입장은 9일이나 10일께 내놓겠다"고 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고교생들 수능 가채점 분석 ▶6면

굿모닝 예향 - 김넷과 재즈에 빠지다 ▶17-18면

손흥민 환상의 감아차기 10호 골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주민 의견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주민 투표 실시 → 지자체장 유치 신청

군 공항 들어서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 사업 (4,500억 원)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 군 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주민 고용 통해 생산·취업 유발
- 이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
- 군부대 인원 (2,500여 명) + 동반가족 / 외출·외박 확대 시행 (21,000여건), 2018년 기준.